

아베 내각의 일본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시각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에 나타난 보도 프레임의 역동적 과정*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배재영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

박경우 동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이 연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이 출범한 후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에 대해 한국 언론이 어떤 반응으로 대응했으며, 내각 시기별 보도과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엔트만(Enatman)의 프레임 분석틀과 치이(Chi)와 맥콤스(McCombs)가 제안한 ‘프레임 변화(frame-changing)’ 개념을 적용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언론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해 반성적 회고를 하거나 미래 지향적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양국의 현안적 논쟁이나 쟁점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또한 국가적 단위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적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양국 간의 갈등원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꼽았으며, 일본 내각을 갈등유발 주체로 지목했다. 이론적으로 한국 언론에서 자주 지적 되어 온 정파적·이데올로기적 요인이 적어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관한 한 두드러지게 작동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관찰자 입장에 서기보다는 정부가 지향하는 대(對)일본 정책을 지지, 옹호하거나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전달하는 자국중심의 애국주의적 보도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KEYWORDS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 프레임 변화, 이데올로기 지향성, 국가 간 갈등이슈, 애국주의적 보도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의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 wsl@dongseo.ac.kr, 제1저자

*** haniprsn@gmail.com

**** pekawe@dau.ac.kr, 교신저자

1. 문제의 제기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풀어야 할 해묵은 숙제이자, 양국 언론이 가장 민감하게 다뤄온 외교적 이슈에 속한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처리 문제에 대한 일본 조야(朝野)의 작은 움직임도 한국 언론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져 왔으며, 때로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기도 했다. 언론이 비중 있게 다루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는 늘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켜 왔지만, 이를 저널리즘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별로 없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자기반성의 부족과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 보상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둘러싸고 한국 언론의 비판보도와 이에 대한 일본 언론과 일본 사회의 자기변명과 옹호가 서로 충돌하면서 소모전으로 일관해 왔다. 이 연구는 언론지 상을 통해 자주 집단적 이슈로 부상(浮上)해 온 일본 정부의 과거사 처리 문제, 그중에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해 피해 당사국인 한국의 언론이 이 문제를 어떻게 조명하는지에 주목했다.

일본의 역대 정부 가운데 지금의 아베 내각만큼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가 양국 간에 쟁점이 된 예도 없다. 2006년 9월 26일 아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외교적 문제로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양국 언론 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언론 전쟁의 성격을 띠기도 했다(김동윤·이현주·정연주, 2016; 남상구, 2013; 유승관·강경수, 2013). 아베 총리의 발언은 자주 한국 언론을 통해 민감한 국가적 이슈로 발전했으며, 다양한 사회적 갈등 의제를 만들어 내는 뇌관 역할을 했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 인식에 대해 한국 언론의 보도가 갈등적이고, 부정적으로 틀 지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국과 일본의 언론이 상대국 국가 정상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분석한 연구(김동윤 등, 2016)에 의하면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이미지 프레임은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의 논리를 초월하여 부정 일색으로 나타났다. 유승관과 강경수(2013)는 한국과 일본신문에 나타난 상대국 관련 보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 신문이 일본을 보도할 때 “어느 쪽도 아니다”와 같은 중립적인 기사가 가장 많았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기사가 긍정적 이미지를 주는 기사보다는 많았다. 특히 의견기사에서는 이념적 성향을 막론하고, 아베 정부의 최근의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성격의 논조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었다.

국가 간 갈등 이슈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는 그간 다수 이뤄져 왔으나(김성해, 2008; 이창호, 2004; Entman, 1991; Herman & Chomsky, 2002), 같은 국가 내의 정치적 성향이 상이한 언론 매체가 국가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외교적 이슈에 대해 보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적다. 이 연구는 아베 총리의 일본 과거사 정책이나 발언에 대

해 한국 언론, 구체적으로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사설과 칼럼 등 의견기사가 어떤 관점에서 문제의 이슈를 현저하게 강조해 주장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설이나 칼럼은 어떤 이슈에 대한 시각이나 관점을 제시하는 의견 공간이자, 매체의 프레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이다. 무엇보다 국가 간 외교 이슈에 대한 신문의 사설과 칼럼은 해당 국가의 시각과 국민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곽정래·이준웅, 2009; 김수정, 2008; 최종환·곽대섭·김성욱, 2014).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 선상에서 한국의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이 아베 정부의 집권 시기에 따라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의 변화를 드러내 왔는지 ‘프레임 변화(frame-changing)’ 개념을 적용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프레임 변화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언론의 입장이나 시각이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역동적 과정에 대한 개념이다(Chi & McCombs, 2004).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한국 사회의 여론을 살펴보고, 국가적 갈등 이슈에 대한 언론의 보도 과정에 정치적 성향의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며, 아베 내각의 대(對)한국 정책의 변화를 추적해보며, 이를 통해 한국 언론에 반영되어 나타난 일본의 과거사 의제의 변화와 특징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뉴스의 역동적 프레임 과정

언론의 뉴스 보도는 특정한 프레임(frame)을 통해 구성된다. 프레이밍(framing)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구성하는 과정이라면 프레임(frame)은 그 결과로 나타난 메시지의 구조, 혹은 인식의 틀을 의미한다.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프레임은 수용자들의 인식 구조 속에 존재하는 해석의 틀로서 스키마(schema) 혹은 인지적 대본(script)과 호환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Tankard, Hendrickson, Silberman, Bliss, & Ghanem, 1991). 따라서 프레이밍은 텍스트가 인간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수용되어 왔으며(Entman, 1993), 정보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중요한 의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어떤 사안에 대한 인식 틀을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의 판단과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뉴스 프레이밍은 고정돼 있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역동적인 변화를 거치는 생명주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완수·심재웅·심재철, 2008). 프레이밍은 어떤 대상

의 모든 관점이나 속성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적인 특징을 상황에 따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성된다(McCombs & Ghanem, 2001). 언론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무엇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속성(attributes)을 포함하는 다른 버전(version)의 뉴스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Chyi & McCombs, 2004). 뉴스를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이슈나 대상에 대해 보도를 하더라도, 시간 흐름에 따라 다른 속성과 강조점을 제시함으로써 수용자의 주목도를 높인다. 이 과정에 뉴스 프레임িং은 자연스럽게 이슈의 역동적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역동적 프레임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치이와 맥콥스(Chyi & McCombs, 2004)는 뉴스 프레임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을 ‘프레임 변화(frame-changing)’라고 명명했다.

기존의 정적인 프레임 연구는 연구자가 설정한 프레임이 해당 사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보도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현실과 괴리된 채 자신(연구자)이 설정한 특정한 틀(프레임)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동적인 프레임 연구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기자들이 어떠한 스키마(schema)를 갖고 사건이나 이슈를 프레임링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사가 사건에 대해 갖게 되는 이해방식과 접근방식, 더 나아가 수용자들이 한 사건에 대해 인식하는 동태적인 프레임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관찰해 볼 수 있다(이완수 등, 2008).

프레임을 역동적 관점에서 접근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치이와 맥콥스(2004), 무서트와 카(Muschert & Carr, 2006), 디미트로바(Dimitrova, 2006), 이완수 등(2008) 등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치이와 맥콥스는 1999년에 발생한 미국 콜럼바인(Columbine) 고등학교에서의 총격사건에 관한 보도를 분석하면서 시간 차원(과거, 현재, 미래)과 공간 차원(개인, 커뮤니티, 주, 미국 사회, 국제 사회)을 도입하여 총격사건 이슈에 대해 미디어가 보여주는 보도 프레임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은 뉴스 이벤트의 보도 프레임이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 시간 차원과 공간 차원을 끌어들이어 이슈 현저성의 유형이 뉴스에 어떻게 적용되고 변형되어 가는가를 시차별로 보여주었다. 무서트와 카는 치이와 맥콥스가 개발한 시공간 프레임 개념을 활용하여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미국에서 발생한 9개의 학교 총격 사건을 보도한 뉴스들을 프레임의 변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무서트와 카는 미디어가 이슈의 현저성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슈에 따라 다른 관점을 강조하는 일종의 프레임 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디미트로바(2006)는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을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아이엔가(Iyenga, 1991)가 제시한 일화적 프레임

과 주제적 프레임이 사건이 전개되는 동안 어떻게 현저화 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전쟁 초기에는 갈등과 폭력이라는 두 개의 일화적 프레임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다가, 전쟁 후반부에 와서는 이라크 재건과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한 주제적 프레임이 강조되고 있음을 밝혔다.

한국에서는 이완수 등(2008)이 2007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교포학생 조승희의 버지니아 공대 총격사건을 분석하기 위해 치이와 맥콥스(2004)의 동적 프레임 분석틀을 이용하여 한국의 조선일보와 미국의 뉴욕타임스를 비교 분석한 논문을 역동적 프레임 분석의 대표적 연구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그 결과 이완수 등(2008)은 뉴욕타임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 프레임과 시간 프레임 중에서 특정 프레임을 강조해가는 패턴을 보인 반면, 조선일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프레임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양한 프레임을 혼용해 사용함으로써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향후 프레임의 변화라는 관점을 다양한 사건이나 이슈들에 적용함으로써 뉴스 보도에 내재된 프레임의 다양한 변화 방식을 분석하는 동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상의 맥락에서 볼 때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아베 내각의 인식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이를 언론이 어떤 관점에서 조명하고, 비평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아베 내각 출범 후 최근까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다양한 미디어 의제가 돌출했다가, 사라지곤 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에 갈등이 유난히 잦았다는 점에서 아베 내각의 과거사 인식 문제는 치이와 맥콥스(2004), 무서트와 카(2006)가 제시한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에서의 역동적 프레임 분석틀을 적용해 살펴보기에 적합한 주제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 처리 문제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특별한 국제뉴스에 속한다. 이런 뉴스는 일반적으로 이해 당사국의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보도 과정에 어떤 요소들이 개입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2) 국가적 이해관계가 걸린 국제뉴스 보도 연구

어떤 뉴스도 진공상태에서 제작되는 경우는 없다. 국가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국제뉴스는 더욱이 미디어 조직의 특징, 해당 국가의 이해관계, 그리고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령 민간 항공기에 대한 격추라는 유사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자국에 의한 격추는 기술적 결함의 문제로서 행위자를 중립적으로 취급하는 반면에, 적대국이 일으킨 행위는 도덕적 폭거라는 관점에서 행위자를 비난하는 식으로 보도한다(Entman, 1991).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중국의 인민일보의 보도 연구에서도 한국에

우호적인 뉴욕타임스는 해당 사건을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키면서 북한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을 비판한 반면에,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의 인민일보는 사건의 쟁점을 피하면서 소극적으로 보도했다(유세경·정지인·이석, 2010). 국제뉴스 보도는 이처럼 미시적 요인(언론인의 가치관과 취향), 조직적 요인(개별 미디어의 지배 및 소유구조), 거시적 요인(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해석과 정보원 활용 방식, 보도 태도, 그리고 프레임의 적용을 달리 한다(김영욱·김성해·이토 이치·장귀량, 2006).

국제뉴스는 그 저변에 자국중심적이며 민족주의적 시각을 갖는 경향이 일반적이지만, 한국 미디어들이 보도하는 일본 관련 뉴스에서는 그러한 편향이 한층 두드러진 편이다(오대영, 2014). 실제로 한국의 4개 신문이 2011년에 보도한 국제뉴스를 분석한 결과(오대영, 2013, 2014)에 따르면 미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중립적인데 비해 일본에 대해서는 부정적 뉴스(57.5%)가 긍정적 뉴스(22.6%)나 중립적 뉴스(19.9%)보다 월등히 많았다. 아울러 정치나 사건, 사고와 같은 경성뉴스는 대체로 부정적인 논조가 많은 반면 연성뉴스의 논조는 긍정적 또는 중립적 태도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서 경성뉴스와 연성뉴스의 게재 비율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일본에 대해서는 연성뉴스가 가장 적게 나타나 부정적 논조가 많음을 밝히기도 했다. 오대영은 특히 한국 언론들이 일본과 관련된 역사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 내용을 부각시키거나 감정적이고 갈등구조 중심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자국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 국제뉴스가 애국주의적 경향을 보인다는 증거의 연구들도 많다. 김성해(2008)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국제통화체제의 위기에 대해 국제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어떠한 보도 성향을 보이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들 신문들은 대외정책을 보도하는 과정에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이들 매체들은 특정 기사에 대한 사회적 의미 부여하기, 특정 방식으로 틀짓기, 전략적인 정보원 활용 등과 같은 담론 전략을 통해 이른바 공중 외교관(public diplomat)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북한의 기아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도 언론은 국제보도 중에서도 그것이 국익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대외정책의 경우에는 자민족 중심주의와 애국주의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심훈, 2004).

언론의 이러한 보도양상은 일본 문제에서도 발견된다. 이지원(201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 갈등 이슈에 대해 한국 언론의 보도는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지만, 일본의 대한국 정책, 정치경제적 여건이나 국제적 환경에 의해 보도하는 방식들

이 달라졌음을 확인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군이 위안소의 설치 및 운영과 위안부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1993. 8. 4)가 발표된 시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의해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무라야마 도미이치(平山富市) 총리의 담화(1995. 8. 13)와 같은 정치적 사건이 있는 시기, 그리고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개최와 같은 이벤트가 열린 시기에는 일본 관련 보도에서 부정적 뉴스보다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뉴스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등장했다. 그러나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수정과 집단적 자위권 추진 및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시사한 아베 내각에 들어서는 한·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논조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이지원, 2014).

하지만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같은 국가 간의 오랜 역사적 갈등 이슈에 대해 국내 언론이 어떤 관점에서 차별적으로 다루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단순한 국가 간 외교 이슈의 차원을 넘어 국민적 정서와 감정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민족주의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이념적 차이가 민족주의적 이슈에 대한 보도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별다른 요인변수로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에 속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진보나 보수와 같이 언론사가 가진 이념적 성향이 일본 문제를 포함한 외교적 이슈에서도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을 포함한 국제뉴스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그와 같은 가정은 대체로 입증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에서 각기 이루어진 역사교과서 개정에 관한 국내 언론의 보도를 언론사의 이념적 지향성과 연관 지어 분석한 연구(오명원,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역사교과서 관련 담론에서는 언론사별 정파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일본에 대해 진정성과 신뢰 부족을 근거로 대일 강경 입장을 공통적으로 드러냈다. 이처럼 국내 문제가 아닌 외교나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성향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보도 경향을 보여준다.¹⁾

국제뉴스에서 미디어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데 대해 슈메이커

1) 국제뉴스 보도를 이념적 성향이 아닌 개별 언론사의 차이로만 접근한 연구들에서는 미디어 간 차이가 다양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독도영유권, 위안부 및 역사교과서와 같은 한국과 일본의 갈등 이슈를 둘러싼 미디어 담론을 분석한 연구(홍하은·오명원·김성혜, 2014)라든가, 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 신문의 보도 특성을 분석한 연구(김수정, 2008) 등에서는 기사의 주제와 관점, 강조점 등에서 매체별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와 리스(Shoemaker & Reese, 1996)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그 이유로 꼽았다. 각국의 미디어에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어서 특정 사건에 대한 보도는 해당 국가의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특히 국가 이익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개별 언론의 이데올로기가 크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이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국내의 반응이나 대응을 보도할 때에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파성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점이다. 즉, 위안부와 역사교과서 같은 동일한 한·일 갈등 사안에 대해서 보수지는 김대중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자주 언급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진보지는 이명박 정권의 실용주의 노선을 비판하는 차별적 관점을 드러냈다(홍하은·오명원·김성해, 2014). 언론은 국제 이슈에 대해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 노선을 공통적으로 견지하지만, 그것이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이념적 지향성에 따른 편향된 관점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경향도 보인다(오명원, 2015).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한국 언론 가운데 보수적 매체의 하나인 조선일보와 진보적 매체의 하나인 경향신문이 일본의 과거사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보도하는가를 아베 내각 시기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이 연구는 2006년 9월 26일 출범한 아베 총리와 그 내각의 일본의 과거사 처리 문제에 대해 한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베 내각의 한국정책, 특히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양국 간의 갈등 요인 중에서도 아베 일본 총리가 언급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신문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는가를 분석하려는 데에 목적이 뒀다. 한·일 간에는 해묵은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역사 교과서 왜곡, 집단 자위권 행사, 평화헌법 개정 등 해결되지 않은 갈등 요인이 상존한다. 이러한 갈등요인은 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한·일 관계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경색국면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한·일 관계는 특히 아베 일본총리가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의 검증과 수정의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냉각국면에 접어들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으로 양국 간에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 등에 가까스로 합의를 했지만, 한·일 간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협력관계는 여전히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의 언론은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고, 양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갈등요인을 이슈화하고, 정

부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또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연구는 일본 아베 내각의 일본의 과거사 문제 인식에 대해 한국의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이 어떤 관점으로 현실을 재구성해 주조(鑄造)해왔는지를 프레임 변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프레임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 아베 내각의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양태를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는 아베 내각의 일본의 과거사 정책에 대해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집권 시기에 따라 어떠한 보도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했다.

연구문제 1: 아베 내각의 집권 시기에 따라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보도량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신문기사는 다양한 시간과 공간적 차원의 속성을 동원해 기술된다(Chyi & McCombs, 2004; Muschert & Carr, 2006). 치이와 맥콤스는 신문기사에 내재한 시간적 차원(과거, 현재, 미래)과 공간적 차원(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에 따라 뉴스는 궁극적으로 시간 프레임과 공간 프레임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 역시 시간적으로 현안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평가와 회고, 그리고 미래의 전망과 지향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적 차원의 프레임 구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또한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갈등원인, 책임주체, 그리고 해결주체가 누구에게 속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간 프레임의 탐색도 필요하다. 이에 근거하여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에서는 아베 내각의 일본의 과거사 정책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사용된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에서의 프레임 구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문제 2: 아베 내각의 과거사 정책에 대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기사에서 시간적 차원의 프레임 활용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두 신문이 아베 내각 시기에 따라 시간적 프레임 활용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아베 내각의 과거사 정책에 대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기사에서 공간적 차원의 프레임 활용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두 신문이 아베 내각시기에 따라 공간적 프레임 활용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프레임 분석을 실제 내용분석에 적용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이 연구에서는 그중에서

도 엔트만(Entman, 1991, 1993)이 제시한 ① 문제에 대한 정의(problems definition),²⁾ ② 인과적 해석(causal interpretation),³⁾ ③ 도덕적 평가(moral evaluation),⁴⁾ ④ 해결책의 제시(treatment recommendation)⁵⁾라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미디어가 뉴스를 보도할 때에는 그 이슈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것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 내러티브의 구성방식이다.

엔트만이 제안한 프레임 해석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기사작성의 일반적인 방법들을 잘 반영한다. 문제의 정의는 사안의 원인과 주체로, 인과적 해석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도덕적 평가는 과거 행위에 대한 사후적 평가로, 해결책 제시는 해결방식으로 각각 규정해 볼 수 있다. 엔트만(Entman, 1993)의 프레임 분석틀은 언론이 어떤 이슈를 기사화할 때, 그 이슈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데 적합한 분석 방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베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해 한국 언론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나왔으며, 왜 제안되었는지, 그리고 아베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방은 무엇이 긴요한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문제 4>에서는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과 관련해 갈등원인, 갈등주체, 해결주체, 해결방식 등 내각 시기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문제 4-1: 아베 내각의 과거사 정책에 대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기사에서 집권 시기에 따른 갈등원인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2: 아베 내각의 과거사 정책에 대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기사에서 집권 시기에 따른 갈등주체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3: 아베 내각의 과거사 정책에 대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기사에서 집권 시기에 따른 해결주체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4: 아베 내각의 과거사 정책에 대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기사에서 집권 시기에 따른 해결방식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문제의 정의는 행위 당사자가 한 행위를 비용과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과적 해석은 문제를 야기한 다양한 원인들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4) 도덕적 평가는 문제의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에 관해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해결책의 제시는 문제에 대한 처방책을 제시하고 정당화하며, 그로 인한 효과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4.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한·일 간 갈등원인인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고노담화/무라야마 담화 재검증, 야스쿠니신사 참배, 일본의 안보법안(평화헌법 제9조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아베 신조의 과거사 인식, 일본의 우경화 경향과 같은 아베 내각의 과거사 정책에 대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평가를 사실과 칼럼을 통해 살펴보았다. 사실과 칼럼은 일반 기사와 달리 외교문제에 대한 해당 국가 언론의 입장과 관점, 그리고 주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의견 공간이다. 분석에 필요한 사실과 칼럼을 수집하기 위해 경향신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카인즈를 활용했고, 조선일보는 카인즈에서 기사가 제공되지 않아 해당 신문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했다. 카인즈(www.kinds.or.kr)와 신문사 홈페이지(www.chosun.com, www.khan.co.kr)에서 ‘아베’, ‘아베 총리’, ‘아베 내각’, ‘과거사’, ‘위안부’, ‘역사교과서’, ‘우경화’, ‘안보법안’, ‘평화헌법’, ‘집단적 자위권’, ‘신사 참배’ 등을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했다. 분석 자료 가운데 아베 내각의 과거사 정책에 따른 한·일 간 갈등 이슈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한 기사나 일본의 국내 정치 기사, 그리고 북핵 문제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연구의 자료 수집 범위는 일본의 아베 내각이 출범한 2006년 9월 26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직후인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은 모두 세 번의 아베 내각이 출범한다. 제1기 내각은 2006년 9월 26일부터 2007년 9월 26일, 제2기 내각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4년 12월 24일, 제3기 내각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분석기간에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사실과 칼럼 수는 <표 1>에서 보

표 1. 아베 내각의 대한민국 정책에 따른 한·일 간 갈등 이슈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빈도 단위: n (%)

| | 조선일보 | | | 경향신문 | | | 전체 |
|----------|-----------|-----------|-----------|-----------|-----------|-----------|------------|
| | 사실 | 칼럼 | 소계 | 사실 | 칼럼 | 소계 | |
| 아베 1기 내각 | 16 (16.7) | 3 (8.3) | 19 (14.4) | 7 (11.9) | 8 (22.2) | 15 (15.8) | 34 (15.0) |
| 아베 2기 내각 | 53 (55.2) | 20 (55.6) | 73 (55.3) | 26 (44.1) | 15 (41.7) | 41 (43.2) | 114 (50.2) |
| 아베 3기 내각 | 27 (28.1) | 13 (36.1) | 40 (30.3) | 26 (44.1) | 13 (36.1) | 39 (41.1) | 79 (34.8) |
| 전체 | 96 (100) | 36 (100) | 132 (100) | 59 (100) | 36 (100) | 95 (100) | 227 (100) |

* 1기 내각: 2006.9.26.~2007.9.26. / 2기 내각: 2012.12.26.~2014.12.24. / 3기 내각: 2014.12.24.~2015.12.31.

는 바와 같이 모두 227건으로 사설 155건(68.3%), 칼럼(내·외부) 72건(31.7%)이었다. 이것을 아베 내각의 집권 시기에 따라 구분하면, 아베 1기 내각에서는 사설 23건, 칼럼 11건이었고, 2기 내각은 사설 79건, 칼럼 35건이며, 3기 내각은 사설 53건, 칼럼 26건이었다 (<표 1> 참고).

2) 분석단위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과거사 갈등 이슈는 한·일 간에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다. 이 때문에 양국 정부는 물론 개인 간, 조직 간의 대립과 확연한 인식차를 드러내 왔으며, 국가 간에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한국은 과거 일본 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억지주장을 펼치며,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하여 내각 각료들과 일본 우익단체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와 1995년 일본 무라야마 전 총리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식민 지배를 공식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의 재검증을 강조했다. 또한 아베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 제9조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 큰 인식 차를 드러냈다. 이처럼 아베 내각은 일본의 우경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재검증, 평화헌법 제9조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 등으로 주변국과의 갈등을 초래해 왔다. 이 연구는 엔트만(Entman, 1993)이 제시한 ① 문제에 대한 정의(problems definition), ② 인과적 해석(causal interpretation), ③ 도덕적 평가와 책임 소재, ④ 해결책의 제시(treatment recommendation)라는 개념을 적용해 한·일 간 갈등 이슈에 대해 한국의 미디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는가를 분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아베 내각의 일본의 과거사 정책에 따른 한·일 간 갈등 이슈와 관련한 분석유목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개발했다. 언론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2명에 대해 코딩 지침을 교육시킨 후 내각 시기별로 50%에 해당하는 기사를 가지고 사전 분석을 실시했다. 기존 연구에서 활용한 유목(김용복, 2013; 남상구, 2013; 이신철, 2012)과 사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된 하부 분석유목과 조작적 정의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수정과 보완과정을 통해 귀납적으로 추출했다.

한편 아래에 제시된 시간프레임은 하나의 기사에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기사 맥락상 현재를 강조하는 프레임이면 현재프레임으로, 과거나 미

래를 강조하는 내용이면 과거 혹은 미래 프레임으로 간주하여 코딩했다.

(1) 시간 프레임

치이와 맥콤스는 시간(time) 프레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① 과거: 갈등 이슈를 기사화하면서 과거의 갈등 사례, 개인사 등 역사적 사실이나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하는 경우
예: “勝戰國 위해 정부가 나서 위안부 모집했던 일본”(조선일보, 2014, 3, 4)
- ② 현재: 갈등 이슈를 기사화하면서 현재 진행 상황이나 협상, 그리고 쟁점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 이슈를 바탕으로 기술하는 경우
예: “교묘한 말로 ‘식민지 지배 사죄’ 피해간 아베 談話”(조선일보, 2015, 8, 15)
- ③ 미래: 갈등 이슈를 기사화하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 전망, 향후 제기될 문제점, 그리고 대안이나 대책을 바탕으로 기술하는 경우
예: “정상회담 마친 한·일, 위안부 문제를 넘어야 한다”(경향신문, 2015, 11, 2)

(2) 공간 프레임

공간(space) 개념은 단순한 지리적 거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수준에서부터 조직적, 사회적, 정부적, 국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연속적이고, 단계적인 개념을 내포한다. 또한 공간은 이슈의 발생장소(when), 이슈의 주체(who), 이슈의 내용(what), 그리고 이슈의 원인(why)에 관한 내용을 포괄한다(Chyi & McCombs, 2004; 이완수 등, 2008). 이 연구에서 공간 프레임은 치이와 맥콤스의 개념을 차용하여 개인적 프레임, 조직적 프레임, 사회적 프레임, 정부적 프레임, 국제적 프레임으로 구분하였다.

- ① 개인적 프레임: 한·일 간 갈등 이슈와 관련해 특정 개인을 갈등의 원인, 책임, 그리고 문제해결 등의 주체로 묘사하거나 개인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예: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인데...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인 부끄러움 자체를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조선일보, 2013, 5, 23)
- ② 조직적 프레임: 한·일 간 갈등 이슈와 관련해 특정 조직(예: 보수우익단체, 학술단체 등)을 갈등의 원인, 책임, 문제해결 등의 주체로 묘사하거나 기술하는 경우
예: “위안부와 일 우파의 ‘흙발(土足)’”(경향신문, 2007, 3, 11)

- ③ 사회적 프레임: 한·일 간 갈등 이슈와 관련해 사회 공동체를 갈등의 원인, 책임, 문제 해결 등의 주체로 묘사하거나 기술하는 경우
예: “일본 시민들까지 나서는 아베 역사관 성토”(조선일보, 2015, 6, 10)
- ④ 국가적 프레임: 한·일 간 갈등 이슈를 기술하면서 정부나 내각, 국가를 갈등의 원인, 책임, 문제해결 등의 주체로 묘사하거나 기술하는 경우
예: “평화를 포기한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결정”(경향신문, 2014, 7, 1)
- ⑤ 국제적 프레임: 한·일 간 갈등 이슈를 기술하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와 대비하여 언급하거나 국제사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예: “믿음 주는 독일, 의심받는 일본”(조선일보, 2007, 4, 11)

(3)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와 관련한 기사주제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주요 갈등원인인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 안보법안(예: 평화헌법 수정 및 이를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등으로 기사주제를 구분하였으며, 신문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분석 유목을 추출했다.

- ① 위안부 강제동원: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아베 내각의 정책 및 인식을 중심으로 기술한 기사
예: “위안부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일본군이나 경찰이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연행한 일이 없다고 주장”(경향신문, 2007, 3, 11)
- ② 일본의 안보법안: 평화헌법 9조 개정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에 대한 아베 내각의 정책 및 인식을 중심으로 기술한 기사
예: “일본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보며”(경향신문, 2006, 11, 3) / “‘보통국가 일본’은 결코 ‘보통’이 아니다”(조선일보, 2007, 4, 16)
- ③ 일본의 우경화: 아베 내각의 대한국 정책에 따른 일본의 우경화 경향을 중심으로 기술한 기사
예: “나치 방식 改憲 들고 나온 막가는 日 극우 정치인들”(조선일보, 2013, 7, 31)
- ④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베 총리 및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하여 기술한 기사
예: “아베, 정상회담서 야스쿠니 참배 중단 약속해야”(경향신문, 2006, 10, 2) / “외교 고립 자초한 아베 내각의 야스쿠니 참배”(조선일보, 2013, 4, 23)

- ⑤ 독도 영유권 분쟁 : 독도 영유권 및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한 아베 내각의 정책 및 인식에 대해 기술한 기사
예: “방위백서에 ‘독도는 우리 땅’ 오폭 놓는 일본”(조선일보, 2007, 7, 9) / “한·일 관계 개선하자면서 도발 계속하는 일본”(경향신문, 2014, 1, 28)
- ⑥ 역사교과서 왜곡: 역사교과서에 대한 아베 내각의 정책 및 인식을 중심으로 기술한 기사
예: “독도를 일본 영토로 明記하라”는 일본 정부”(조선일보, 2007, 4, 2) / “미래세대에 한·일 갈등 씨앗 뿌린 일본”(경향신문, 2014, 4, 4)
- ⑦ 일본의 과거사 인식: 아베 내각의 대한민국 정책에 따른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예: “戰犯 무한 추적 독일, 총리가 전쟁 범죄 부인하는 日本”(조선일보, 2013, 5, 30) / “아베 총리와 각료들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전면 부정하고 … 침략전쟁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중고생에게 가르치도록 교과서 개정도 유도하고 있다”(조선일보, 2014, 2, 15)
- ⑧ 한·일 간 외교: 한·일 정부 간의 외교정책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 기사
예: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게 바란다”(경향신문, 2014, 10, 7)
- ⑨ 다자 간 외교: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양자 간 혹은 다자 간 외교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기사
예: “한·중·일, 갈등 대신 협력을 제도화해야”(조선일보, 2014, 11, 7) / “한·중·일 정상회담, 일본의 노력에 달렸다”(경향신문, 2014, 11, 16)

(3) 일본의 과거사 갈등의 원인

- ① 위안부 강제동원: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한 갈등
예: “일본군은 태평양 전쟁 때 식민 지배를 받던 조선 여성을 비롯하여 중국·필리핀·태국 여성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던 네덜란드·호주 여성까지 성 노예로 강제 동원했다.”(조선일보, 2013, 5, 23)
- ② 일본의 안보법안: 평화헌법 9조 개정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갈등
예: “일본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보며”(경향신문, 2006, 11, 3) / “‘보통국가 일본’은 결코 ‘보통’이 아니다”(조선일보, 2007, 4, 16)
- ③ 고노 담화 재검증: 일본 정부에 의한 고노담화 재검증 논의와 관련한 갈등
예: “고노담화 훼손하고 인류양심을 저버린 일본”(경향신문, 2014, 6, 20) / “韓·日 대화하려면 ‘고노담화 말장난’부터 중단해야”(조선일보, 2014, 3, 12)

- ④ 무라야마 담하 재검증: 일본 정부에 의한 무라야마 재검증 논의와 관련한 갈등
예: “식민지배 사죄하라”는 日 보수 巨頭의 충고”(조선일보, 2015, 8, 10)
- ⑤ 야스쿠니 신사참배: 아베 총리 및 내각인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한 갈등
예: “아베, 정상회담서 야스쿠니 참배 중단 약속해야”(경향신문, 2006, 10, 2) / “외교 고립 자초한 아베 내각의 야스쿠니 참배”(조선일보, 2013, 4, 23)
- ⑥ 독도영유권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및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한 갈등
예: “방위백서에 ‘독도는 우리 땅’ 옹호 놓는 일본”(조선일보, 2007, 7, 9) / “한·일 관계 개선하자면서 도발 계속하는 일본”(경향신문, 2014, 1, 28)
- ⑦ 아베 신조의 과거사 인식: 아베 일본총리의 개인적 과거사 인식과 관련한 갈등
예: “일본 최고지도자의 도덕과 양심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인데…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인 부끄러움 자체를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조선일보, 2013, 5, 23)
- ⑧ 한국의 미숙한 대응: 일본의 대한국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예: “최소한 악수하고 있는 동안에는 허리춤에서 총을 빼들 수 없듯,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지속했더라면 일본이 ‘안면몰수’의 상태로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경향신문, 2013, 8, 21) / “어 설픈 희망에 기대거나 그 일방적 기대가 빚나갔다 해서 이번에는 그 반대로 기울어버리는 ‘시계추 외교’로부터 탈피해야 한다.”(조선일보, 2006, 10, 3)
- ⑨ 역사교과서 왜곡: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갈등
예: “독도를 일본 영토로 明記하라는 일본 정부”(조선일보, 2007, 4, 2) / “미래세대에 한·일 갈등 씨앗 뿌린 일본”(경향신문, 2014, 4, 4)
- ⑩ 일본의 우경화: 과거사 인식과 관련한 일본의 우경화 경향으로 인한 갈등
예: “나치 방식 改憲 들고 나온 막가는 日 극우 정치인들”(조선일보, 2013, 7, 31) / “일본의 노골적 우경화 행보를 우려한다”(경향신문, 2013, 4, 23)

(4) 일본의 과거사 갈등의 주체

- ① 일본 내각: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에 대한 책임이 일본 내각과 각료들에게 있다고 기술하는 경우
예: “외교 고립 자초한 아베 내각의 야스쿠니 참배”(조선일보, 2013, 4, 23)
- ② 아베 신조: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에 대한 책임이 아베

일본 총리에게 있다고 기술하는 경우.

예: “‘닌자’ 아베의 겉과 속”(경향신문, 2006, 10, 8) / “결국 야스쿠니 도발한 아베, 이제 ‘과거의 일본’은 없다”(조선일보, 2013, 12, 27)

- ③ 일본의 우익단체: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에 대한 책임이 일본의 우익단체에 있다고 기술하는 경우.

예: “日 우파의 가미카제 활용법”(조선일보, 2007, 5, 13) / “위안부와 일 우파의 흠발(土足)”(경향신문, 2007, 3, 11)

- ④ 한·일 정부: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에 대한 책임이 한국과 일본 정부 양쪽에 있다고 기술하는 경우

예: “한·일 외교장관회담 ‘위안부 협상’ 조금할 이유 없다”(경향신문, 2015, 12, 25)

- ⑤ 한국정부: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에 대한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기술하는 경우

예: “이러려고 ‘타협’했는가”(경향신문, 2015, 12, 30)

- ⑥ 미국정부: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에 대한 책임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기술하는 경우

예: “일본 군사대국화 부추기는 미국의 잘못된 계산”(경향신문, 2014, 10, 4)

- ⑦ 미·일 정부: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에 대한 책임이 미국과 일본 정부에 있다고 기술하는 경우

예: “현실이 된 日 군사 역할 확대, 우리 전략은 무엇인가”(조선일보, 2013, 11, 23)

(5) 일본의 과거사 갈등의 해결주체

- ① 일본 내각: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을 해결할 책임이 일본 내각과 각료들에게 있다고 기술하는 경우

예: “한·중·일 정상회담, 일본의 노력에 달렸다”(경향신문, 2014, 11, 16) / “외교 고립 자초한 아베 내각의 야스쿠니 참배”(조선일보, 2013, 4, 23)

- ② 아베 신조: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을 해결할 책임이 아베 일본 총리에게 있다고 기술하는 경우.

예: “‘닌자’ 아베의 겉과 속”(경향신문, 2006, 10, 8) / “결국 야스쿠니 도발한 아베, 이제 ‘과거의 일본’은 없다”(조선일보, 2013, 12, 27)

- ③ 한·일 정부: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을 해결할 책임이

한국과 일본 정부 양쪽에 있다고 기술하는 경우

예: “한·일 외교장관회담 ‘위안부 협상’ 조급할 이유 없다”(조선일보, 2015, 12, 25)

- ④ 한국 정부: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을 해결할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기술하는 경우

예: “8월의 바람은 ‘잊지 말라’ 하는데…”(경향신문, 2015, 7, 31)

- ⑤ 미국 정부: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을 해결할 책임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기술하는 경우

예: “일본 군사대국화 부추기는 미국의 잘못된 계산”(경향신문, 2014, 10, 4)

- ⑥ 미·일 정부: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을 해결할 책임이 미국과 일본 정부에 있다고 기술하는 경우.

예: “현실이 된 日 군사 역할 확대, 우리 전략은 무엇인가”(조선일보, 2013, 11, 23)

- ⑦ 일본의 우익단체: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을 해결할 책임이 일본의 우익단체에 있다고 기술하는 경우.

예: “나카야마 부부의 경우”(조선일보, 2007, 3, 7)

- ⑧ 일본의 시민단체: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을 해결할 책임이 시민단체에 있다고 기술하는 경우.

예: “일본사회의 ‘얼굴 없는 폭력’”(경향신문, 2015, 10, 6)

(6) 일본의 과거사 갈등의 문제해결방식

- ① 정치적 해결방식: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인식 문제를 한·일 정상회담 등 정치적 협력이나 협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입장

예: “결국 평화헌법 버리는 아베 정권”(경향신문, 2015, 9, 18)

- ② 사회적 해결방식: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나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

예: “일본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다”(경향신문, 2015, 8, 31)

- ③ 역사적 해결방식: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

예: “아베 총리가 일제 패망 70년인 8·15에 맞춰 내놓을 담화(談話)에서 진정 달라진 일본의 모

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출발은 일제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해 진정한 사죄의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조선일보, 2015, 6, 23)

- ④ 국제적 해결방식: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동아시아 국가 등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력,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

예: “글로벌 지식인들”, “역사는 지울 수 없다”, “아베에게 쓴소리”(조선일보, 2015, 7, 30)

3) 신뢰도 검증

코더 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언론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2명이 전체 분석 대상의 10% 가량에 해당하는 조선일보 15건, 경향신문 15건 등 30건을 임의로 추출해 교차적으로 코딩했다. 연구자의 1명과 코더 2명은 분석항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며, 서로 의견이 불일치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뒤 재코딩함으로써 신뢰도 수준을 높였다. 신뢰도 검증은 코헨의 카파(Cohen's k) 공식을 이용해 측정했다.

분석 항목별 신뢰도 수준은 기사주제 0.84, 시간프레임 0.76, 공간프레임 0.79, 갈등원인 0.83, 갈등주체 0.85, 해결주체 0.82, 문제해결방식 0.76으로 나타나 전 항목에 대해 0.76~0.85의 분포를 나타냈다. 신뢰도 검증 후 코딩 데이터는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5. 분석결과

1) 기사주제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와 관련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기사주제가 아베 내각의 집권 시기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선일보는 한·일 외교 관련 기사가 30.3%로 가장 많았고,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가 18.2%, 일본의 과거사 인식이 15.9%, 다자간 외교 9.8%, 일본의 안보법안 9.1% 순이었다. 경향신문은 위안부 강제동원 기사가 25.3%, 일본의 안보법안 20.0%, 일본의 과거사 인식 14.7%, 한·일 간 외교 12.6%로 나타났다.

집권시기별로 살펴보면, 아베 내각 1기에 조선일보는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63.2%)를 주요 이슈로 다룬 가운데 한·일 외교(15.8%)와 일본의 안보법안(10.5%), 역사교과서

표 2. 아베 내각 집권 시기에 따른 한·일 간 갈등 이슈에 대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기사주제

| | 조선일보 | | | | 경향신문 | | | | 전체 |
|------------------|--------------|--------------|--------------|--------------|-------------|-------------|--------------|--------------|--------------|
| | 내각1기 | 내각2기 | 내각3기 | 소계 | 내각1기 | 내각2기 | 내각3기 | 소계 | |
| 한·일 외교 | 3 (15.8) | 16 (21.9) | 21 (52.5) | 40 (30.3) | 2 (13.3) | 6 (14.6) | 4 (10.3) | 12 (12.6) | 52 (22.9) |
| 위안부 강제동원 | 12 (63.2) | 11 (15.1) | 1 (2.5) | 24 (18.2) | 6 (40.0) | 7 (17.1) | 11 (28.2) | 24 (25.3) | 48 (21.1) |
| 일본의 과거사 인식 | | 15 (20.5) | 6 (15.0) | 21 (15.9) | | 4 (9.8) | 10 (25.6) | 14 (14.7) | 35 (15.4) |
| 일본의 안보법안 | 2 (10.5) | 8 (11.0) | 2 (5.0) | 12 (9.1) | 2 (13.3) | 9 (22.0) | 8 (20.5) | 19 (20.0) | 31 (13.7) |
| 다자 간 외교 | | 8 (11.0) | 5 (12.5) | 13 (9.8) | | 2 (4.9) | 3 (7.7) | 5 (5.3) | 18 (7.9) |
| 일본의 우경화 | | 5 (6.8) | 2 (5.0) | 7 (5.3) | 2 (13.3) | 5 (12.2) | 2 (5.1) | 9 (9.5) | 16 (7.0) |
| 야스쿠니 신사 참배 | | 6 (8.2) | | 6 (4.5) | | 3 (7.3) | | 3 (3.2) | 9 (4.0) |
| 역사교과서 왜곡 | 1 (5.3) | 2 (2.7) | 1 (2.5) | 4 (3.0) | | 1 (2.4) | 1 (2.6) | 2 (2.1) | 6 (2.6) |
| 독도 영유권 | 1 (5.3) | 2 (2.7) | | 3 (2.3) | | 3 (7.3) | | 3 (3.2) | 6 (2.6) |
| 아베 신조의 과거사 인식 | | | 2 (5.0) | 2 (1.5) | 3 (20.0) | 1 (2.4) | | 4 (4.2) | 6 (2.6) |
| 전체 | 19 (100) | 73 (100) | 40 (100) | 132 (100) | 15 (100) | 41 (100) | 39 (100) | 95 (100) | 227 (100) |

* 1기 내각: 2006.9.26.~2007.9.26. / 2기 내각: 2012.12.26.~2014.12.24. / 3기 내각: 2014.12.24.~2015.12.31.

** 조선일보: $\chi^2(18) = 56,685, p < .001$ / 경향신문: $\chi^2(18) = 30,966, p < .05$

***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음.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

왜곡(5.3%), 독도 영유권(5.3%) 등이 이슈화되었다. 경향신문은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40.0%)를 주된 이슈로 제시했으며, 아베 신조의 과거사 인식(20.0%), 한·일 외교(13.3%), 일본의 안보법안(13.3%), 일본의 우경화 경향(13.3%) 순으로 이슈화했다. 내각 2기에 조선일보는 한·일 외교(21.9%)와 일본의 과거사 인식(20.5%),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15.1%), 다자 간 외교(11.0%)를 주요 이슈로 다루었고, 경향신문은 일본의 안보법안(22.0%), 위안부 강제동원(17.1%), 한일 외교관계(14.6%), 일본의 우경화(12.2%)를 주요 이슈로 보도했다. 내각 3기에 조선일보의 주요 이슈는 한·일 외교(52.5%)였고, 일본의 과거사 인식(15.0%), 다자 간 외교(12.5%) 순이었다. 경향신문은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28.2%)를

표 3.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보도된 한·일 간 갈등 이슈의 시간프레임 활용

| | 조선일보 | | | | 경향신문 | | | | 전체 |
|----|--------------|--------------|--------------|---------------|--------------|--------------|--------------|--------------|---------------|
| | 내각1기 | 내각2기 | 내각3기 | 소계 | 내각1기 | 내각2기 | 내각3기 | 소계 | |
| 과거 | 3 (15.8) | 12 (16.4) | 1 (2.5) | 16 (12.1) | 1 (6.7) | 6 (14.6) | 2 (5.1) | 9 (9.5) | 25 (11.0) |
| 현재 | 15 (78.9) | 59 (80.8) | 37 (92.5) | 111 (84.1) | 14 (93.3) | 34 (82.9) | 34 (87.2) | 82 (86.3) | 193 (85.0) |
| 미래 | 1 (5.3) | 2 (2.7) | 2 (5.0) | 5 (3.8) | | 1 (2.4) | 3 (7.7) | 4 (4.2) | 9 (4.0) |
| 전체 | 19 (100) | 73 (100) | 40 (100) | 132 (100) | 15 (100) | 41 (100) | 39 (100) | 95 (100) | 227 (100) |

* 1기 내각: 2006.9.26.~2007.9.26. / 2기 내각: 2012.12.26.~2014.12.24. / 3기 내각: 2014.12.24.~2015.12.31.

** 조선일보: $\chi^2(4) = 5.353, p > .05$. / 경향신문: $\chi^2(4) = 4.258, p > .05$.

***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음.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

주요 이슈로 보도하면서 일본의 과거사 인식(25.6%), 일본의 안보법안(20.5%), 한·일 외교(10.3%)를 의제로 다뤘다(〈표 2〉 참조).

2) 시간 프레임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한·일 간 갈등 이슈 보도에 나타난 시간 프레임이 아베 내각의 집권시기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관한 것이다. 시간 프레임의 활용에 있어서 두 신문은 과거 프레임(11.0%)과 미래 프레임(4.0%)보다는 현재 프레임(85.0%)을 지배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내각 집권시기별로 살펴보면, 내각 1기에 조선일보의 현재 프레임 활용은 78.9%였고, 과거 프레임은 15.8%, 미래 프레임 5.3%였다. 경향신문은 현재 프레임을 93.3%, 과거 프레임 6.7%였다. 내각 2기에 조선일보는 현재 프레임을 80.8%, 과거 프레임 16.4%, 미래 프레임 2.7%였고, 경향신문은 현재 프레임 82.9%, 과거 프레임 14.6%, 미래 프레임 2.4%였다. 내각 3기에 들어 조선일보는 현재 프레임 92.5%, 과거 프레임 2.5%, 미래 프레임 5.0%였고, 경향신문은 현재 프레임 87.2%, 과거 프레임 5.1%, 미래 프레임 7.7%였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현재 프레임을 지배적 프레임으로 사용해 아베 내각의 대한민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갈등 이슈를 다뤘다(〈표 3〉 참조).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과거사 인식과 관련해서 한·일 간 갈등 이슈를 보도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갈등 상황이나 인물 등을 중심으로 현재 시점에 집중했고, 향후 한·일 관계를 전망하거나 과거 시점에서 한·일 관계를 조명하는 기사는 적었다.

표 4.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보도된 한·일 간 갈등 이슈의 공간프레임 활용

| | 조선일보 | | | | 경향신문 | | | | 전체 |
|-----|-------------|--------------|--------------|--------------|-------------|--------------|--------------|--------------|---------------|
| | 내각1기 | 내각2기 | 내각3기 | 소계 | 내각1기 | 내각2기 | 내각3기 | 소계 | |
| 개인적 | 4 (21.1) | 4 (5.5) | 3 (7.5) | 11 (8.3) | 4 (26.7) | 6 (14.6) | 3 (7.7) | 13 (13.7) | 24 (10.6) |
| 조직적 | | 1 (1.4) | | 1 (0.8) | 3 (20.0) | | | 3 (3.2) | 4 (1.8) |
| 국가적 | 7 (36.8) | 40 (54.8) | 26 (65.0) | 73 (55.3) | 6 (40.0) | 22 (53.7) | 22 (56.4) | 50 (52.6) | 123 (54.2) |
| 사회적 | 6 (31.6) | 7 (9.6) | 7 (17.5) | 20 (15.2) | 1 (6.7) | 7 (17.1) | 9 (23.1) | 17 (17.9) | 37 (16.3) |
| 국제적 | 2 (10.5) | 21 (28.8) | 4 (10.0) | 27 (20.5) | 1 (6.7) | 6 (14.6) | 5 (12.8) | 12 (12.6) | 39 (17.2) |
| 전체 | 19 (100) | 73 (100) | 40 (100) | 132 (100) | 15 (100) | 41 (100) | 39 (100) | 95 (100) | 227 (100) |

* 1기 내각: 2006.9.26.~2007.9.26. / 2기 내각: 2012.12.26.~2014.12.24. / 3기 내각: 2014.12.24.~2015.12.31.

** 조선일보: $\chi^2(8) = 17.637, p < .05$ / 경향신문: $\chi^2(8) = 21.678, p < .05$

***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음.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

3) 공간 프레임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한·일 간 갈등 이슈 보도에서 공간 프레임이 아베 내각 집권시기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두 신문은 국가적 프레임(54.2%)을 지배적으로 사용하면서, 국제적 프레임(17.2%), 사회적 프레임(16.3%), 개인적 프레임(10.6%), 조직적 프레임(1.8%) 순으로 활용했다.

내각 집권시기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내각 1기와 3기에 국가적 프레임과 사회적 프레임을, 내각 2기에는 국가적 프레임과 국제적 프레임을 주로 사용했고, 경향신문은 내각 1기에는 국가적 프레임과 개인적 프레임을 주로 사용했고, 내각 2기와 3기에는 국가적 프레임과 사회적 프레임을 주된 프레임으로 사용했다(〈표 4〉 참조).

4)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보도된 한·일 간 과거사 갈등 이슈

(1) 한·일 간 과거사 갈등원인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나타난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원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베 내각 집권 기간 두 신문에 나타난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의 주된 원인은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22.3%)였고, 일본의 안보법안(17.7%), 고노담화 재검증(17.4%), 야스쿠니 신사 참배(11.7%), 무라야마 담

표 5.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보도된 한·일 간 과거사 갈등원인

다중응답 : n (%)

| | 조선일보 | | | | 경향신문 | | | | 전체 |
|---------------|--------------|--------------|--------------|--------------|-------------|--------------|--------------|--------------|--------------|
| | 내각1기 | 내각2기 | 내각3기 | 소계 | 내각1기 | 내각2기 | 내각3기 | 소계 | |
| 위안부 강제동원 | 13 (59.1) | 12 (11.5) | 13 (30.2) | 38 (22.5) | 6 (30.0) | 6 (11.3) | 13 (32.5) | 25 (22.1) | 63 (22.3) |
| 일본의 안보법안 | 2 (9.1) | 14 (13.5) | 8 (18.6) | 24 (14.2) | 3 (15.0) | 14 (26.4) | 9 (22.5) | 26 (23.0) | 50 (17.7) |
| 고노 담화 재검증 | 1 (4.5) | 27 (26.0) | 5 (11.6) | 33 (19.5) | 2 (10.0) | 7 (13.2) | 7 (17.5) | 16 (14.2) | 49 (17.4) |
| 야스쿠니 신사참배 | 1 (4.5) | 16 (15.4) | 2 (4.7) | 19 (11.2) | 4 (20.0) | 8 (15.1) | 2 (5.0) | 14 (12.4) | 33 (11.7) |
| 무라야마 담화 재검증 | | 17 (16.3) | 4 (9.3) | 21 (12.4) | 1 (5.0) | 3 (5.7) | 5 (12.5) | 9 (8.0) | 30 (10.6) |
| 한국의 미숙한 대응 | 2 (9.1) | 3 (2.9) | 8 (18.6) | 13 (7.7) | | 3 (5.7) | 1 (2.5) | 4 (3.5) | 17 (6.0) |
| 독도 영유권 분쟁 | 2 (9.1) | 5 (4.8) | | 7 (4.1) | | 5 (9.4) | | 5 (4.4) | 12 (4.3) |
| 역사교과서 왜곡 | 1 (4.5) | 5 (4.8) | 1 (2.3) | 7 (4.1) | | 3 (5.7) | 2 (5.0) | 5 (4.4) | 12 (4.3) |
| 일본의 우경화 | | 5 (4.8) | 1 (2.3) | 6 (3.6) | 1 (5.0) | 3 (5.7) | 1 (2.5) | 5 (4.4) | 11 (3.9) |
| 아베 신조의 과거사 인식 | | | 1 (2.3) | 1 (0.6) | 3 (15.0) | 1 (1.9) | | 4 (3.5) | 5 (1.8) |
| 전체 | 22 (100) | 104 (100) | 43 (100) | 169 (100) | 20 (100) | 53 (100) | 40 (100) | 113 (100) | 282 (100) |

* 1기 내각: 2006.9.26. ~ 2007.9.26. / 2기 내각: 2012.12.26. ~ 2014.12.24. / 3기 내각: 2014.12.24. ~ 2015.12.31.

화 재검증(10.6%) 순이었다.

내각 집권시기별로 살펴보면, 내각 1기에 조선일보는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59.1%)를 중심으로 일본의 안보법안, 한국의 미숙한 대응, 독도 영유권 분쟁(9.1%) 등을 과거사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다루었고, 경향신문은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30.0%)를 중심으로 야스쿠니신사 참배(20.0%), 일본의 안보법안, 아베 신조의 과거사 인식(15.0%) 문제를 주요 갈등원인으로 평가했다. 내각 2기에 조선일보는 고노담화 재검증(26.0%)을 주요 갈등원인으로, 무라야마 담화 재검증(16.3%), 야스쿠니 신사참배(15.4%), 일본 안보법안(13.5%), 위안부 강제동원(11.5%) 순으로 기술했다. 경향신문은 일본의 안보법안(26.4%)을 주요 갈등원인으로 평가하면서 야스쿠니신사 참배(15.1%), 고노 담화 재검증(13.2%), 위안부 강제동원(11.3%) 순으로 다루었다. 내각 3기에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모두 위안부 강제동

원(30.2%, 32.5%) 문제를 주된 갈등원인으로 하여 조선일보는 일본의 안보법안과 한국의 미숙한 대응(18.6%)을 갈등원인으로 평가했고, 경향신문은 일본의 안보법안(22.5%)과 고노 담화 재검증(17.5%)을 갈등원인으로 기술했다(〈표 5〉 참조).

내각 집권시기별 특징을 보면, 조선일보는 1기 내각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장 강조했으나, 내각 3기로 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대신에, 일본의 안보법안과 일본에 대한 한국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대한 프레임을 상대적으로 많이 동원했다. 경향신문은 1기에 비해 3기에 와서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프레임을 많이 다뤘으며, 동시에 일본의 안보법안과 고노 담화 재검증 프레임을 동원하는 프레임 변화 전략을 보였다.

(2) 한·일 간 과거사 갈등주체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나타난 한·일 간 과거사 갈등에서 갈등주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일본 내각(75.1%)을 주된 갈등주체로 평가했으며, 다음으로 일본의 우익단체(7.7%), 아베 신조(7.2%), 한·일 정부(4.1%), 한국 정부(3.2%), 미·일 정부(2.3%) 순으로 기술했다.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일본 내각을 주요 갈등주체

표 6.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보도된 한·일 간 과거사 갈등주체

| | 조선일보 | | | | 경향신문 | | | | 전체 |
|----------|--------------|--------------|--------------|--------------|-------------|--------------|--------------|--------------|---------------|
| | 내각1기 | 내각2기 | 내각3기 | 소계 | 내각1기 | 내각2기 | 내각3기 | 소계 | |
| 일본 내각 | 13 (68.4) | 59 (83.1) | 27 (73.0) | 99 (78.0) | 9 (60.0) | 30 (73.2) | 28 (73.7) | 67 (71.3) | 166 (75.1) |
| 일본의 우익단체 | 2 (10.5) | 4 (5.6) | 2 (5.4) | 8 (6.3) | 3 (20.0) | 3 (7.3) | 3 (7.9) | 9 (9.6) | 17 (7.7) |
| 아베 신조 | 3 (15.8) | 3 (4.2) | 3 (8.1) | 9 (7.1) | 3 (20.0) | 3 (7.3) | 1 (2.6) | 7 (7.4) | 16 (7.2) |
| 한·일 정부 | | 2 (2.8) | 2 (5.4) | 4 (3.1) | | 2 (4.9) | 3 (7.9) | 5 (5.3) | 9 (4.1) |
| 한국 정부 | 1 (5.3) | 1 (1.4) | 2 (5.4) | 4 (3.1) | | | 3 (7.9) | 3 (3.2) | 7 (3.2) |
| 미·일 정부 | | 2 (2.8) | 1 (2.7) | 3 (2.4) | | 2 (4.9) | | 2 (2.1) | 5 (2.3) |
| 미국 정부 | | | | | | 1 (2.4) | | 1 (1.1) | 1 (0.5) |
| 전체 | 19 (100) | 71 (100) | 37 (100) | 127 (100) | 15 (100) | 41 (100) | 38 (100) | 94 (100) | 221 (100) |

* 1기 내각: 2006.9.26.~2007.9.26. / 2기 내각: 2012.12.26.~2014.12.24. / 3기 내각: 2014.12.24.~2015.12.31.

** 조선일보: $\chi^2(10) = 7,422, p > .05$ / 경향신문: $\chi^2(12) = 16,296, p > .05$

***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음.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

(78.0%)로 기술한 가운데, 아베 신조(7.1%)와 일본의 우익단체(6.3%)를 갈등주체로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일본 내각을 주요 갈등주체(71.3%)로 평가하면서 일본의 우익단체(9.6%)와 아베 신조(7.4%), 한·일 정부(5.3%)를 갈등주체로 기술했다.

내각 집권시기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두 신문은 아베 내각의 집권기간 전반에 걸쳐 일본 내각과 아베 신조, 일본의 우익단체를 주요 갈등주체로 기술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었다. 다만, 내각 3기에 조선일보는 아베 신조(8.1%)와 일본의 우익단체, 한·일 정부, 한국 정부(5.4%)를 갈등주체로 설명했고, 경향신문은 일본의 우익단체, 한·일 정부, 한국 정부(7.9%)를 갈등주체로 평가했다(〈표 6〉 참조).

(3)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의 해결주체

두 신문은 아베 내각의 대한국정책에 따른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을 해결할 주체로 일본 내

표 7.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보도된 한·일 간 과거사 해결주체

| | 조선일보 | | | | 경향신문 | | | | 전체 |
|---------|-------------|--------------|--------------|--------------|--------------|--------------|--------------|--------------|---------------|
| | 내각1기 | 내각2기 | 내각3기 | 소계 | 내각1기 | 내각2기 | 내각3기 | 소계 | |
| 일본 내각 | 9 (47.4) | 47 (73.4) | 15 (41.7) | 71 (59.7) | 10 (71.4) | 19 (50.0) | 23 (63.9) | 52 (59.1) | 123 (59.4) |
| 한·일 정부 | 1 (5.3) | 4 (6.3) | 4 (11.1) | 9 (7.6) | | 8 (21.1) | 6 (16.7) | 14 (15.9) | 23 (11.1) |
| 한국 정부 | 1 (5.3) | 5 (7.8) | 11 (30.6) | 17 (14.3) | | 2 (5.3) | 3 (8.3) | 5 (5.7) | 22 (10.6) |
| 아베 신조 | 7 (36.8) | 2 (3.1) | 2 (5.6) | 11 (9.2) | 2 (14.3) | 2 (5.3) | 1 (2.8) | 5 (5.7) | 16 (7.7) |
| 미국 정부 | | 3 (4.7) | | 3 (2.5) | 1 (7.1) | 3 (7.9) | 1 (2.8) | 5 (5.7) | 8 (3.9) |
| 일본 시민단체 | | | 1 (2.8) | 1 (0.8) | | 3 (7.9) | 2 (5.6) | 5 (5.7) | 6 (2.9) |
| 일본 우익단체 | 1 (5.3) | 1 (1.6) | | 2 (1.7) | 1 (7.1) | 1 (2.6) | | 2 (2.3) | 4 (1.9) |
| 미·일 정부 | | | 1 (2.8) | 1 (0.8) | | | | | 1 (0.5) |
| 기타 | | 2 (3.1) | 2 (5.6) | 4 (3.4) | | | | | 4 (1.9) |
| 전체 | 19 (100) | 64 (100) | 36 (100) | 119 (100) | 14 (100) | 38 (100) | 36 (100) | 88 (100) | 207 (100) |

* 1기 내각: 2006.9.26.~2007.9.26. / 2기 내각: 2012.12.26.~2014.12.24. / 3기 내각: 2014.12.24.~2015.12.31.

** 조선일보: $\chi^2(16) = 44,172, p < .001$ / 경향신문: $\chi^2(12) = 11,866, p > .05$

***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음.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

각(59.4%), 한·일 정부(11.1%), 한국 정부(10.6%), 아베 신조(7.7%), 미국 정부(3.9%) 순으로 기술했다. 신문사별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일본 내각(41.7%), 한국 정부(14.3%), 아베 신조(9.2%), 한·일 정부(7.6%) 순으로 갈등 해결주체를 평가했고, 경향신문은 일본 내각(59.1%)과 한·일 정부(15.9%), 한국 정부(5.7%), 미국 정부(5.7%), 아베 신조(5.7%), 일본 시민단체(5.7%)를 해결주체로 기술했다.

내각의 집권시기별로 살펴보면, 내각 1기에는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모두 일본 내각(47.4%)과 아베 신조(36.8%)를 주요 해결주체로 평가했다. 내각 2기와 3기에 조선일보는 일본 내각(73.4%, 41.7%)과 한국정부(7.8%, 30.6%)를, 경향신문은 일본내각(50.0%, 63.9%)과 한·일 정부(21.1%, 16.7%)를 주요 해결주체로 기술했다(<표 7> 참조).

(4) 과거사 문제해결방식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국제적 해결방식 등 다섯 가지 방식을 활용하는 데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일 간의 갈등이슈는 양국 간에 외교적 절차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55.4%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시민단체나 학자 등 사회구성원들과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17.9%였고, 중국과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 등 국제적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17.4%, 일본 총리와 내각이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 강제동원을 반성한 무라야마, 고노 담화를 인정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표 8.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보도된 한·일 간 과거사 문제해결방식

| | 조선일보 | | | | 경향신문 | | | | 전체 |
|--------|--------------|--------------|--------------|--------------|-------------|--------------|--------------|--------------|---------------|
| | 내각1기 | 내각2기 | 내각3기 | 소계 | 내각1기 | 내각2기 | 내각3기 | 소계 | |
| 정치적 방식 | 10 (52.6) | 40 (55.6) | 22 (56.4) | 72 (55.4) | 7 (50.0) | 21 (51.2) | 24 (61.5) | 52 (55.3) | 124 (55.4) |
| 사회적 방식 | 4 (21.1) | 7 (9.7) | 8 (20.5) | 19 (14.6) | 2 (14.3) | 10 (24.4) | 9 (23.1) | 21 (22.3) | 40 (17.9) |
| 국제적 방식 | 1 (5.3) | 17 (23.6) | 6 (15.4) | 24 (18.5) | 3 (21.4) | 8 (19.5) | 4 (10.3) | 15 (16.0) | 39 (17.4) |
| 역사적 방식 | 4 (21.1) | 8 (11.1) | 3 (7.7) | 15 (11.5) | 2 (14.3) | 2 (4.9) | 2 (5.1) | 6 (6.4) | 21 (9.4) |
| 전체 | 19 (100) | 72 (100) | 39 (100) | 130 (100) | 14 (100) | 41 (100) | 39 (100) | 94 (100) | 224 (100) |

* 1기 내각: 2006.9.26.~2007.9.26. / 2기 내각: 2012.12.26.~2014.12.24. / 3기 내각: 2014.12.24.~2015.12.31.

** 조선일보: $\chi^2(6) = 7.709, p > .05$ / 경향신문: $\chi^2(6) = 3.955, p > .05$

***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음.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역사적 해결방식이 9.4%였다.

내각 집권시기별로 살펴보면, 내각 1기에 두 신문 모두 정치적 해결방식(52.6%, 50.0%)을 중심으로 기술했고, 조선일보는 사회적 해결방식(21.1%)과 역사적 해결방식(21.1%)을, 경향신문은 국제적 해결방식(21.4%)을 각각 제안했다. 내각 2기에 조선일보는 정치적 해결방식(55.6%)과 국제적 해결방식(23.6%)을, 경향신문은 정치적 해결방식(51.2%)과 사회적 해결방식(24.4%)을 제시했다. 내각 3기에 조선일보는 정치적 해결방식(56.4%)과 사회적 해결방식(20.5%)을, 경향신문 역시 정치적 해결방식(55.3%)과 사회적 해결방식(23.1%)을 제시해 큰 차이가 없었다(〈표 8〉 참조).

5) 내용분석 정리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특이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사주제의 경우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과거사 문제 가운데 한·일 외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일본의 과거사 인식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신문사별로 보면, 조선일보는 한·일 외교관계, 일본의 과거사 인식 등 여러 갈등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뤘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많이 다루는 가운데, 일본의 안보법안에도 주목했다. 시기별로 보면, 조선일보는 제 1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2기, 3기에 한·일 외교 문제를 중심으로 다뤘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은 제 1기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2기에는 일본 안보법안, 제 3기에 와서는 다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다뤘다.

둘째는 시간 프레임의 경우다. 전체적으로 현재 프레임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했다. 조선일보, 경향신문 두 신문 모두 현재 프레임을 많이 사용해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두 신문은 과거를 조명하고, 미래의 한·일 관계를 전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는 매우 적었다. 또한 두 신문 모두 아베 내각 모든 시기에 걸쳐 현재 프레임을 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셋째는 공간 프레임의 경우다. 전체적으로 한·일 양국을 중심으로 다루는 국가적 프레임이 가장 많았다. 신문별로는 조선일보의 경우 국가적 프레임을 주로 사용한 가운데, 국제적 프레임을 동원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 역시 국가적 프레임을 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시민단체나 학계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프레임을 상대적으로 많이 동원한 점이 흥미롭다.

내각 시기별 보도특징을 보면, 조선일보는 내각 1기에 개인적 프레임과 사회적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다가, 2기, 3기로 오면서 국가적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는 프레임 전이 현상을 보였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은 전체적으로 국가적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 가운데

데, 1기 내각에서는 개인 프레임을 상대적으로 많이 동원했으나, 3기 내각으로 오면서 사회적 프레임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였다.

넷째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갈등원인의 경우다. 두 신문 모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가 한·일 양국 간에 갈등을 낳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였다. 일본 안보법안도 갈등원인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다. 신문별로는 조선일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고노 담화 재검증 문제를 양국 간의 주요 갈등원인으로 꼽은 반면에, 경향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 안보법안을 주요 갈등원인으로 지목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시기별 특징을 보면, 조선일보는 1기 내각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장 강조했으나, 내각 3기로 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대신에, 일본의 안보법안과 일본에 대한 한국의 미숙한 대응에 대한 프레임을 상대적으로 많이 동원했다. 경향신문은 1기에 비해 3기에 와서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프레임을 많이 다뤘으며, 동시에 일본의 안보법안과 고노 담화 재검증 프레임을 동원하는 프레임 변화 전략을 보였다.

다섯째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갈등주체의 경우다. 전체적으로 갈등주체를 일본 내각에 귀인하는 프레임을 압도적으로 많이 제시했다. 두 신문 모두 일본 내각을 갈등주체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었다. 내각 시기별 특징을 보면,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1기 내각 시기에 일본 내각과 아베 신조 총리를 갈등주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경향신문은 일본 우익단체를 갈등주체로 상당부분 귀인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여섯째는 해결주체의 경우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주체는 전체적으로 일본 내각과 한·일 양국 정부에 귀인하는 프레임 전략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신문사별로는 조선일보가 일본내각과 한국정부를 일본의 과거사 문제해결의 주체로 본 반면에, 경향신문은 일본 내각과 한·일 양국 정부를 문제해결 주체로 프레이밍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내각 시기별로는 조선일보가 1기에 일본 내각과 아베 총리를 해결주체로 평가한 가운데, 2기, 3기에 와서는 한국정부를 문제해결 주체로 강조해 프레이밍하는 점이 흥미롭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은 일본 내각을 문제해결 주체로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정부를 문제해결 주체로 강조하는 프레이밍 구성방식을 보였다.

일곱 번째, 과거사 문제해결 방식의 경우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해결 방식은 전체적으로 정치적 수단이 가장 강조되었다. 신문사별로는 두 신문 모두 일본의 과거사 문제해결 방식을 정치적 협력이나 협상, 그리고 시민단체와 양식 있는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사회적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경향신문은 시민사회단체나 학자 등 전문가 집단의 중재역할을 문제해결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6. 결론과 함의

일본 역대 정부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만큼 일본의 과거사 처리문제에 대해 갈등을 불러 일으켜 온 지도자도 없다. 아베 내각이 출범한 후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된 배경에는 일본의 과거사 처리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의 우경화 움직임, 그리고 한국 국민에 대한 인색한 사과가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과거사 처리문제와 같은 국제뉴스는 수용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현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미디어 보도에 의한 비개인적 영향력(impersonal influence)은 직접적인 생활공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아베 내각출범 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일본의 과거사 처리문제를 다룬 한국 언론의 보도양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이 연구는 아베 일본 내각 출범 후 지금까지 보여 온 ‘일본의 과거사 처리문제’에 대해 한국 언론이 어떻게 반응해 왔으며, 내각 시기별 보도과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엔트만(Entman, 1991, 1993)의 프레임 분석틀과 치이와 맥콕스(Chi & McCombs, 2004)가 제안한 ‘프레임 변화(frame-changing)’ 개념을 적용해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함의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언론에서 자주 지적되어 온 정파적, 이데올로기적 요인이 적어도 일본의 과거사 처리문제에 관한 한 두드러지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의 과거사 처리문제에 대해 한국 언론은 이념성에 관계없이 거의 엇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김영욱(2009)의 지적대로 “한국 언론의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언론의 이념적 정파성도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인 보도 앞에서는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서 통계적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아베 내각의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한국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치중립적(35.2%)이고, 긍정적인 의미전달(1.3%)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논조는 6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애국주의 보도관행이 두드러졌다. 물론 일본의 과거사 갈등문제에 대한 원인이나 해결주체에 대한 보도프레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보도 경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적어도 아베정부의 일본의 과거사 인식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따로, 경향신문 따로가 아니었다. 이는 언론이 국가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이념적 정파성보다, 자국중심의 관점에서 애국주의적으로 경도(slant)되어 보도하는 관행이 더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적 피해자 국가의 언론이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보도하지 않을 방법은 사실 많지 않다. 언론은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여론과 의견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한국 언론이 역대 일본정부가 보여 온 과거사 문제인식에 대해 보도규범에 따라 긍정적 관점이나 사실중심의 프레임에 갖고 보도했다면, 해당 언론은 한국사회로부터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인들은 적어도 일본의 과거사 처리문제에 관한 한 ‘한국은 피해자이고, 일본은 가해자’라는 관념을 보편적인 정서로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이 문제를 전달하는 언론의 보도 프레임이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반영하고, 한국사회 공동체의 여망을 반영해 보도할 것을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국가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그 가운데서도 한·일 양국의 역사적 과제의 하나인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한 저널리즘의 기본가치인 중립적이고 객관주의적인 보도가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언론이 국가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 특히 역사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일본의 과거사 처리문제에 대해 자국중심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수익측면에서도 시사점을 보여준다. 한 국가의 언론은 좋든, 싫든 그 사회의 환경 속에서 생존한다. 상업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한국 언론이 사회 공동체의 여론이나 입장과 배치되는 보도시각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만약 특정의 한국 언론매체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자국관점에서 보도하지 않았다면, 구독이나 광고거부 사태를 맞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본에 대해 우호적 또는 중립적 입장에서 보도했을 경우 독자확보나 광고수주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이론적으로 엔트만이 제안한 프레임 해석방식인 문제에 대한 정의, 인과적 해석, 도덕적 평가, 해결책 제시 등은 국가 간 갈등 이슈에 대한 언론의 보도경향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사안의 성격을 놓고 볼 때, 갈등을 유발한 원인은 무엇이며, 갈등을 유발한 주체는 누구이고, 또 이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이슈다. 그런 점에서 엔트만의 프레임 분석틀은 외교적 갈등 이슈에 대한 단순한 사실 제시에서 나아가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유기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과거사 처리문제는 원인과 해법에 대한 주체가 명확한 편이지만, 이에 대한 한·일 양국 간에 역사적 접점 찾기는 쉽지 않다. 한·일 양국 언론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보도에 관한 한 예외 없이 갈등원인, 도덕적 평가의 정당성, 책임과 갈등주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 그리고 해법제시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다. 사안의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엔트만의 문제제기-사안의 의미 해석-사안의 해법제시와 같은 인과적 프레

임 설명방식은 상당히 유용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네 번째는 어떤 정치사회적 이슈도 정태적인 보도 프레임보다는 동태적인 프레임을 통해 문제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 정부의 외교정책이 모든 시간대에 걸쳐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보도태도에 대한 분석도 해당 제가 어떤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이와 맥콥스가 프레임 변화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어떤 정치사회적 사안을 초반부-중반부-후반부, 또는 일자별로 변화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모든 사회적 현상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대한 역동적 프레임을 통해 해당 이슈의 구체적 속성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외교정책, 특히 일본의 과거사 처리문제와 같은 국가적으로 해묵은 의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따라서 시간적 변화에 따라, 또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정책적 의제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를 언론이 어떤 공중의제로 전환시키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보도의 실무적 관점에서도 함의점이 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내 보도는 현재 상황에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적인 평가와 해결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왔다는 점이다. 물론 언론 입장에서는 현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기자에게 뉴스는 먼 과거의 이야기이거나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보고, 듣고, 느끼는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과거사 처리문제는 그 근원이 과거의 사안이자, 동시에 발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미래의 숙제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갈등적 요소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현재 편향적인 보도가 바람직한 사회적 공론장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야말로 역사적으로 긴 시간 속에서 쟁점화 되어온 해묵은 숙제라는 점에서 과거에 대한 역사적 성찰과 함께 미래에 풀어야 할 의제와 해법을 제시하는 전략적 보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 일본과 한국사회에서 제기되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구성해 전달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건설적인 방향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국내 언론들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법을 여전히 한·일 양국이 국가단위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국가적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풀어야 한다는 기계적 프레임 제시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법을 지나치게 국가단위 차원, 또 정치적 협상이라는 공식적인 채널과 수단으로 프레임 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시켜왔다고 할 수 있

다. 국가 간의 갈등적 요소는 개인, 집단, 사회, 국제사회 등 정부 이외의 다양한 개별 주체들이 참여할 때 해소될 여지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언론이 보여준 일본의 과거사 문제해법에 대한 접근방식은 너무 오랫동안 국가 중심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또한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원초적으로 일본이라는 가해자와 한국이라는 피해자가 명백한 이분법적 구도이긴 하지만, 일본 내각이 제시하는 정책의 성격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일본내각과 총리에 책임을 묻고 정치적 수단을 그 해법의 단초로 제시하는 보도태도를 유지했다. 이는 기자들이 사실 기사에서는 비교적 사실(fact)을 전달하는 프레임 구성방식을 취하지만,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의견 기사에서는 이런 사실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보도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국 언론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평가하는 관찰자 입장에 서기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국민의 감정을 확대 재생산하는 대변자 역할로 지위가 부여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적어도 이 연구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한 매체가 이념적으로 보수를 지향하든, 아니면 진보를 지향하든 정부의 정책이나 입장, 그리고 국민의 정서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보도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점이 단적인 사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양국 정부 간에 정치적 타협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정서 속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징적 사건으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책적 함의점도 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언론이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갖고 보도하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대일(對日)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언론은 외교문제와 관련해 상대국의 여론을 전달하고, 자국의 여론을 전파하는 일차적 첨병역할을 수행한다. 자국 언론이 어떤 방향으로 의제를 프레임 하는가에 따라 자국 정부의 정책방향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상대국 정부의 대응정책 역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같은 국가 간 갈등 이슈의 경우는 언론의 보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정책 대응측면에서 관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라는 두 신문의 시각을 중심으로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 전체의 시각을 알 수는 없다. 매체수를 더 늘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다루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과거사 문제 보도에 대한 내부자 인식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데이터 코딩 과정에 지배 프레임을 중심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분석대상인 사설이나 칼럼 같은 의견기사에서는 다양한 시점과 공간이 동시에 등장하는 일이 많은데 이

부분을 반영할 여지가 줄어들다. 끝으로 이 연구는 프레임 분석방법을 이용했지만, 프레임 분석이 갖는 근본적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프레임 분석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메커니즘의 문제나 프레임을 생산하는 기자나 언론사 내부자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를 결합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곽정래·이준웅 (2009).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탈북자 문제에 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 〈조선일보〉·〈한겨레〉 등 5대 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권 6호, 196-217.
- 김영운·이현주·정연주 (2016). 한·일 언론의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양상과 이미지 프레임 연구: 언론 미디어의 국적과 이념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51집, 239-268.
- 김성해 (2008). 국가이익과 언론: 미국 엘리트 언론의 국제통화체제 위기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정보학보〉, 42호, 205-248.
- 김수정 (2008). 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 신문의 보도특성. 〈사회과학연구〉, 19권, 1-20.
- 김영욱 (2009). 독자가 본 한국 언론의 정파성. 〈미디어인사이트〉, 통권 12호.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영욱·김성해·이토 요이치·장귀량 (2006). 〈미디어에 나타난 이웃: 한·중·일 언론의 상호국가보도〉.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용복 (2013). 일본 우경화, 한일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과거사 갈등과 영토분쟁. 〈경제와사회〉, 99호, 36-62.
- 남상구 (2013).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 46집, 227-267.
- 심훈 (2004). 1995년 북한 기아에 대한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분석: 허만과 촘스카의 프로파간다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1호, 57-84.
- 오대영 (2013). 한국신문의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보도양상의 차이와 이유 연구: 뉴스주제, 보도량, 보도태도, 미디어 정보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1호, 74-97.
- 오대영 (2014). 한·일관계 보도 좀 더 냉정하게. 〈관훈저널〉, 132호(가을호), 209-215.
- 오명원 (2015). 〈미디어담론과 집단정체성: 국내 언론의 한일 역사 교과서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세경·정지안·이석 (2010). 미국과 중국 일간지의 '천안함 침몰 사건' 뉴스 보도 비교 분석. 〈미디어, 젠더, 문화〉, 16호, 105-141.
- 유승관·강경수 (2013). 한국과 일본 신문에 나타난 상대국 관련보도 특성에 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31호, 275-307.
- 이신철 (2012). 국가 간 역사갈등 해결을 위한 역사정책 모색: 한일 간 역사분쟁의 포괄적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100호, 222-244.
- 이완수·심재웅·심재철 (2008). 미디어 현저성과 프레임 변화의 역동적 과정: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1호, 386-412.
- 이지원 (2014). 일본의 '우경화': '수정주의적 역사인식'과 아베식 '전후체제 탈각'의 한계. 〈경제와사회〉, 101호, 53-86.
- 이창호 (2004). 뉴욕타임스, 아랍뉴스, 중동타임스의 이라크전쟁 보도 비교. 〈한국언론학보〉, 48권 6호, 4-109.
- 최종환·곽대섭·김성욱 (2014). 북핵 위기의 미디어 담론 분석: 국내 신문의 사실과 칼럼을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18권 2호, 245-281.

홍하은·오명원·김성해 (2014). 집단적 기억의 정치적 관리: 한·일 갈등 이슈를 둘러싼 미디어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7집, 235-276.

- Chyi, H. I., & McCombs, M. (2004). Media salience and the process of framing: Coverage of the Columbine school shooting.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1), 22-35.
- Dimitrova, D. V. (2006). Episodic frames dominate early coverage of Iraq war in the NYT.com. *Newspaper Research Journal*, 27(4), 79-83.
-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6-27.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s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Herman, E. S., & Chomsky, N. (2002). *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ass media*. New York: Pantheon Books.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Combs, M. E., & Ghanem, S. I. (2001). The convergence of agenda-setting and framing. In S. D. Reese, O. H. Gandy, & A. E. Grant (Eds.).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pp. 67-81). Mahwah, NJ: Lawrence Erlbaum.
- Muschert, G. W., & Carr, D. (2006). Media salience and frame changing across events: Coverage of nine school shooting, 1997-2001.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3(4), 747-766.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New York: Longman.
- Tankard, J., Hendrickson, L., Silberman, J., Bliss, K., & Ghanem, S. (1991). *Media frames: Approaches to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Paper presented to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Boston, MA, USA.

투고일자: 2016. 7. 31. 게재확정일자: 2016. 9. 22. 최종수정일자: 2016. 9. 25.

Korean Media's News Coverage of Japan's position on Her Past History Problems Under Abe Shinzo's Cabinet

Dynamic Process of News Framing

Wan Soo Lee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Media Communication, Dongseo University

Jae Young Bae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Kyung Woo Park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Dong-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Korean media covered Japan's position on her past history issues proposed by Abe' Shinzo's cabinet. The researchers adopted Entman's analytical tools for frame analysis and the concept of "frame changing" proposed by Chi and McCombs. The analysis rendered several propositions. First of all, the Korean media's coverage on Japan's past history issues focused heavily on the current conflict among two nations rather than constructing a futuristic viewpoint based on a thorough discussion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opic. In addition, it emphasized that the conflict should be resolved by political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Secondly, the news coverages depicted "comfort women" issues as the prime element of the conflict, describing Abe's cabinet as the major inducer of the conflict. Ideological and political divisions among Korean media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on how they frame Japan's past history issues. In general, Korean media took the stance of ethnocentric "patriotic journalism," advocating Korean government's position and covering the emotional reactions from Korean public instead of providing through and through objective news coverage on Japan's past history issues.

KEYWORDS Japan's Past History Issues, Frame Changing, Ideological Orientation, International Conflict, Patriotic Journalism